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이상희 의원

“첨단 과학기술이 나올 수 있게 연구전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바쁘신 가운데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정위) 위원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취임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은 2000년 첫 국회에서 미래산업을 이끌어 나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을 느낍니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국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법적 뒷받침과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초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과정위’, 제 역할 충실히

■ 위원장께서는 80년대 중반 이후 국회에서 과학기술 관련 입법활동을 가장 많이 그리고 활발히 한 의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정위 위원장에 취임하신 것은 남다른 감회와 각오가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운영방침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대답 李光榮 전북대 과학학과 초빙교수/본지 편집위원

촬영장소 : 국회 의원회관 이상희 의원실

촬영일자 : 2000년 8월 9일 오후 2시

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위원장에 취임한 이상희(李祥羲) 의원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최우선은 과학기술이라며 국회차원에서 법적 뒷받침을 다할 것”이라고. 이 의원은 본지와の特별인터뷰에서 “앞으로 국회 ‘과정위’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여야 의원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시민단체 등과 함께 생산적인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생산적인 국회’, ‘열린 국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얼마나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기존의 형식과 권위의 정형화된 상임위 운영에서 탈피하여 참신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생산적인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작정입니다. 특히, 현장을 찾아가는 상임위를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라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정부가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차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적 뒷받침과 더불어 전자정부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테헤란 벨리 찾아가

■ 최근 ‘과정위’는 테헤란 벨리 간담회 개최, 무파행 선언 등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이나 견해를 말씀해주시지요

테헤란 벨리 간담회와 국회 과정위 무파행 선언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생산적인 국회,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여야 의원들간의 공통된 의견합의로 결정된 것입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정위는 국회에서 모범적인 상임위를 만들어 가고자 얼마 전 과정위 운영개선을 위한 공청회도 열었고,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나라 벤처들이 밀집한 테헤란 벨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생산적인 국회, 열린 국회를 지향하는 상임위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무파행 선언도 과정위 운영개선 방안에 한나로서 과거의 파행국회, 방탄국회처럼 구태의연한 국회의 모습과 상임위 운영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과정위 위원들의 생각과 국민과 시대적 요구의 실천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육만 먹고 노는 국회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21세기에 걸맞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상임위로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뛰어야 할 때입니다.

■ 이위원장께서는 과학기술부 장관 시절(88~90년) 테크노벨트계획을 완성했고 기초연구진흥법을 제정했으며 탁월성 있는 대학교수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우수연구센터(SRC/ERC)제도를 정착시켰는가 하면 국가기술자문회의 위원장 시절(93~96년)에는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활용과 촉진방안에서 21세기의 비전 국가 초고속정보기반 구축과 기초과학연구의 진흥방안 등 많은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문제와 처방에 대해서도 남다른 견해를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최우선은 과학기술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IMF 이후 과학기술 고급 인력들이 연구소를 떠나고 해외로 유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인력들이 더 이상 연



구를 할 수 있는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나올 수 있는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와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이 아니라 부처 간의 이견을 초월한 미래지향적, 중장기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연구정책 체제를 변경해야 합니다. 더불어 연구인력의 경쟁을 유도하고, 연구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등 과학기술 인력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기술 전문 행정가나 기술전문 정치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기술발전이나 세계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정책결정 전문가들이 있어야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술옵션제도 도입

■ 국가 과학기술연구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국가 과학기술연구 주체의 선정에서 예산배분은 물론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일들을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한 것에 비하면 그 결과가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과학기술 투자의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분야의 투자와 인력확보, 경쟁을 통한 연구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구를 위한 연구, 보이기 위한 연구, 상품화되지 않는 연구 등은 연구비 투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낮은 기술경쟁력이라는 상호 불균형으로 나타납니다. 이 점은 빠른 시일 내에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과제의 통합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발자에 대해서는 연구성과물을 직접 배분하고 특허권을 부여하는 등 연구 결과가 직접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개발자가 상품화단계로까지 성공하는 경우 기술옵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경쟁을 통한 활발한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제도에서 해외 전문가와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지원 강화

■ 최근 닷컴 위기론, 벤처 거품론, 벤처 열풍에 따른 투기 붐 등 바람직하지 못한 벤처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지난 2년 동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경제의 주축이 되는 벤처기업을 양적으로 괄목할만큼 성장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원천으로서 '벤처붐'을 조성하는데 성공했고 이로 인해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5천여개의 벤처기업이 붐을 조성하면서 양적 성장은 이룩하였지만 질적 부실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도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벤처위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붓물 터지듯 쏟아진 일관성 없는 지원책이 편승하여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기술력이나 장래성이 없는 벤처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 인터넷 주식공모와 코스닥 벤처의 열풍 등으로 벤처 거품론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

됨으로써 벤처 위기설과 반벤처 정서가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선 정부는 기술력이 뛰어난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들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투자중심의 지원정책을 강화하면서, 세계시장과의 제휴를 모색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간 상호연계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벤처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국회가 할 일은 지난번 테헤란 밸리 간담회에서 느꼈듯이 벤처기업의 현실적인 특성에 맞는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관련법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과학기술정보통신 상임위를 중심으로 테헤란 밸리 간담회에서 모아졌던 업계와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입법, 정책과제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벤처기업들도 국내시장보다는 세계의 첨단 벤처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공동기술개발 협약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세계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하고 기술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과기정책은 국가차원에서

■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국

회가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고 봅니다. 과학기술 관련 입법활동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에서 부처간 관할권 다툼을 조정해주는 역할도 국회가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처별 과학기술 정책은 있어도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이 없다는 비판의 소리를 오래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과학기술기본법 제정과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산자부 등 타 부처의 반발로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벌써부터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중장기 과학기술계획들도 부처간 이기주의와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이는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과학기술력은 곧 그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부처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국회 상임위나 의원 연구단체가 이 문제를 다루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경우 과학기술부가 주동할 것이 아니라 의원 입법으로 제정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과정위는 여·야 의원간에 마찰이 적고 산업발전이라는 대 명제에 충실한

상임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간 이견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이럴 때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조율해 나갈 계획인지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무파행 선언으로 화제가 된 것처럼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분야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요 정책적 사안에 따른 당론이나 이견이 있더라도 언제나 여·야 간사 또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대화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 역량 모아야

■ 과학기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과학기술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해 왔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최근의 IMF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쓰라린 역사는 뒤떨어진 과학기술력이 문제가 되어 파생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융과 벤처위기에 덧붙여 현대위기로 해서 제2의 IMF사태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부와 기업이 연구개발(R&D)투자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과학기술 강국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독일·프랑스 등이 모두 이에 속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과학기술이 기반이 된 사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미래사회에 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은 역량을 집결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①7